

가축분뇨 연료로 거듭난다…남동화력발전소 에너지원 사용

순천에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41억 투입 올해 말 가동 예정
연간 1만7500여 t 처리…탄소중립 실현·축산환경 개선 기대

전남도가 가축 분뇨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를 화력발전소에 제공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순천광양축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이 개최됐다.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용자 20%, 자부담(순천광양축협) 10% 등 총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올해 말 가동될 예정이다. 순천광양축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한우 49개 농가에서 발생하는 연간 1만7500여 t의 가축분뇨를 5700t 규모의 고체연료로 탈바꿈시킨다. 고체연료는 화력발전 공기업인 남동발전주식회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추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전기에너지 생산시설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가축 분뇨의 고체연료화는 탄소중립과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어려움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는 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숙을 거쳐 농지에 살포했다.

하지만, 매일 발생하는 분뇨에 비해 거름을 필요로 하는 토지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축산농가들은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가축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활용하는 곳은 없으나, 관련 기술만큼은 검증이 됐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고흥에서도 분뇨 고체연료화 생산시설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완료돼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는 소 분뇨 외에도 돼지 등 가축 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해 에너지화(바이오가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그동안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대한민국에서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순천시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축산농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침수 피해 입은 어린이집 복구작업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24일 구청 직원과 학부모들이 바닥 장판을 뜯어내는 등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긴급지원반’ 운영·침수 집기 철거…광주·전남 수해복구 총력

김영록 전남지사·공무원들 피해 농가 찾아 자원 봉사

‘괴물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일 수해복구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수해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이날 광주에서는 북구에 광산구 일대 농가에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비닐하우스 파손 등에 대한 복구작업이 진행됐다. 100여 명의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북구 용강동에서는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내 무너진 구조물 정리, 파손된 비닐 제거, 토사·잔해 수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광산구 하산동 일대에서는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무원 13명과 농협광주본부 직원 30명 등 총 43명이 침수 피해를 입은 하우스 농가 2곳을 찾아 침수된 집기 철거, 호랑이콩 작물 제거, 작업장 정리 등을 도왔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

은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단 현장조사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 7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반은 8월 2일까지 북구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가동되며 공공시설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피해 내역 점검에 집중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구별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2억 5000만원 이상, 서구·북구·광산구 122억5000만

원 이상이다. 자치구 소속 행정동 단위선포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억2500만원, 서구·북구·광산구는 12억2500만원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호우 피해가 큰 나주를 찾아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전남도청 도민안전실 공무원들과 31사단 장병 등 60여명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시설하우스 내에 고사된 작물과 물에 잠긴 기자재를 제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호우 피해 복구에는 전남자원봉사센터와 도청 공무원, 인근 군부대, 경찰,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이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면적은 8000ha 가량이다.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나주 등 타 시·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다리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통합돌봄부터 AI까지 광주 매력 알린다

27일까지 로컬 콘테츠 페스타 참가…3개 홍보관 운영

광주시가 통합돌봄 시스템부터 국가 AI시범도시까지 광주만의 특색과 장점을 전국에 알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로컬 콘테츠 페스타’에 참가해 광주의 우수정책과 미래 먹거리인 AI·모빌리티 산업과 관광도시 광주의 매력을 홍보한다. 광주시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성장 잠재력을 공유하는 ‘로컬 콘테츠 페스타’에서 정책홍보관, 미래산업관, 관광홍보관 등 3개의 홍보관을 운영한다. 정책홍보관에서는 돌봄도시, 노벨상의 도시, 문화·스포츠 도시, 대자보 도시로서의 광주를 매력을 소개한다. 시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365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심아어린이병원’ 등 대

한민국을 선도하는 돌봄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202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문화·스포츠 도시로서의 광주도 선보인다. 미래산업관에서는 창업·실증도시, 국가 AI시범도시, 미래 모빌리티도시 광주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초대형 드라잉 시뮬레이터 등 각종 실증장비를 기반으로 AI 인재양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광주를 알리고 광주역창업밸리 중심으로 원스톱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창업수도’로 도약하는 광주의 비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광홍보관에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맛과 멋의 도시, 젊음도시 광주’의 관광 매력을 알린다. 민주와 문화를 접목한 관광상품 ‘소년의 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광주의 야경명소 등 소소한 매력도 알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의회 ‘밀실쪽지 투표’ 민주당 중앙당 조사

면밀히 조사 후 징계 조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시의회가 ‘밀실쪽지 투표’ <7월 24일자 광주일보 5면>을 통해 무소속과 국민의힘 시의원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 ‘해당(害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내란 책임을 물어 위원장 해산 심판 청구가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예산을 짜고 감시하는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과정에 해당 해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행당행위 등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당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면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할 것이며 중앙당에서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을 보면 ‘당의 강

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처벌한다. 민주당은 일부 시의원들이 밀실에서 ‘쪽지 투표’를 진행하고도 ‘합의 추대’라고 거짓 발표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 예결위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예결위 위원장,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